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IAD분석: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중심으로

IAD analysis of the government's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focusing on basic university capacity assessment

유근환*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 교수*

Yoo, Keun Hwan*

Department of Defense Technology Administration, Daegu Science University*

요 약

한국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대학정원의 대비하여 신입생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추진주체가 되어서 대학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들에게 강도가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2011년도 대학구조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현황과 목표를 정리하고 IAD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구조조정정책은 평가적 측면에서 정원감축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성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우며, 핵심적 역량평가 위주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적인 문제로서 정부 차원의 일정 인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평가가 나타나 현 정부가 시행중인 지방대학육성정책과 상호충돌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 주제어 : 대학구조조정, 인구구조변화, 학령인구감소, 대학 정원, 대학평가

Abstract

Korea is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overcome the shortage of freshmen in preparation for college gardens as well as the decrease in school population due to rapid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he Ministry of Education seek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induce management improvement through high-strength structural reforms to universities that are notably competitive in universities by becoming a driving force for university structural reforms, and to improve the overall education level of universit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summarized the current status and goals of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of the 2011 University Structural Assessment and University Basic Competency Assessment conduct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using the IAD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nce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s linked to the reduction of capacity in terms of evaluation, it is difficult to secure fairness and objectivity in the qualitative evaluation,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evaluation should focus on the core quantitative evaluation. In addition, as a follow-up problem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the government's coercive policy evaluations, such as the government-wide reduction of personnel and the limited participation i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s, appeared, resulting in mutual conflict with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promotion policy. Problems were derived.

■ Key Words : university restructuring, demographic change, reduction of school age population, university capacity, university evaluation

* Author: Yoo, Keun Hwan(Daegu Science University, khyoo@tsu.ac.kr)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가진 의미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 보아도 중대하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은 계층상승과 사회적 성공으로의 유일한 통로로 인식되어 왔고, 때문에 우리 국민의 대학에 대한 열망과 교육열은 대단하다. 1996년부터 실행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통해 많은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학으로의 등용문은 넓어졌다. 이를 통해 대학진학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은 해소되었고,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대학에 입학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에는 단순히 대학 입학에 대한 갈망에서 더 나아가 상위권 대학으로의 입학에 대한 욕구로 전환되며 여전히 대학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대학수학능력평가는 국가적 행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왜 시행되고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 들어서는 2014.12.26.부터 시행 되고 있는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한창 시행중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제안되고 결정되어 집행된 데에는 우리나라의 대학 현실과 관련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 1997년 IMF이후 출산율은 급격히 또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학자원도 줄고 있어 종래에는 대학의 정원에 훨씬 못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직접 나서서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대학구조조정 정책평가는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두환 정부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왔으며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관점의 개혁을 2011년도에 시행하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단순 축소지향적 대학구조조정에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모든 대학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부가 평가하여 대학의 자율성

을 위축시키고, 지나친 지표를 강조하여 학문의 상아탑이 아닌, 정부의 지표에 충족하기 위한 대학교로서 목적의 전도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이나 대학의 특성과 역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만 단행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평가 면에서 결과가 정원감축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성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우며, 핵심적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와, 대학구조평가 제외 대학의 경우 결국에는 정부차원의 일정 인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현 정부가 시행중인 지방대학육성정책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2011년도 대학구조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현황과 목표를 정리하고 IAD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상황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령인구변화와 대학정원

한국의 대학 수는 1975년만 하더라도 200개를 넘지 않았고, 대학 재학생의 수 역시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5년에는 대학의 수도 237개로 늘어났고, 전체 대학 재학생 수는 100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증가폭은 더욱 두드러져 1990년과 1995년 사이에는 대학의 수가 60개 이상 늘어났고, 1995년과 2000년 사이에는 대학 재학생의 수가 90만 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학 수와 대학 재학생 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사립대학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1995년과 2000년 사이의 사립대학과 대학 재학생 수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급기야는 대학 정원이 대입 수험생보다 더 많은 사태가 코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학정원을 감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학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화한 다음, 정원 감축, 지원 축

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생겨나면서부터 고등학교와 비교해서 부실 대학 수준이 얼마나 답이 없으면 한계급 낮은 등급과 비교질이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속칭 고등학교만도 못한 대학교를 정리하기 위한 방침도 있다. 대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상위 교육기관인데 하위 교육기관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것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림 1〉 대학정원의 미스매치 현상

2.2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변화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5단계로 평가 대학을 구분하여 미흡한 학교의 예산 삭감, 등록금 지원 제한 등을 논의한다.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대학구조조정 정책평가의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시행한다.

〈표 1〉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

평가 대상	2010~2014년	2015~2017년	2018~2021년
종합/전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구조조정 정책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
교육/사범	교원양성기관평가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기존 대학구조조정 정책평가가 B등급부터 E등급 대학까지 총 2만 4000명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진단은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21년까지 1만 명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기존에는 여러 대학에서 정원을 약간 줄이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몇몇 대학에서 정원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권역별로 나누어 진단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한계대학 등은 지역 안배와 별도로 뽑을 예정이라 지방의 부실대가 지역 안배 덕분에 살아남는 일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20일, 잠정결과를 심의해 각 학교에 통보했으며 가결과는 2018년 8월 23일 오후 2시에 발표하였다.

2018년 8월 24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3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86개교 중 일반대학 19개교, 전문대학 10개교의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결과가 확정되었다.

구분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일반재정	특수목적	국립·공립·민립대학
자율개선대학	제외	전체 지원	신청 가능	
역량강화		일부 지원	신청 가능	지원
진단제외	감축 권고	제한	제한	
재정지원제한 I	실시	제한	제한	일부 제한
재정지원제한 II		제한	제한	전면 제한

〈그림 2〉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확정시 대학별 조치사항

〈표 2〉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학자금제한대학(2020학년도)

구분(제한범위)		대학명
4년제 (11개교)	일반 상환 50% 제한(4개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100% 제한(7개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10 개교)	일반 상환 50% 제한(5개교)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100% 제한(5개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폐교), 서해대학(폐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2.3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평가결과

2018년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한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선정이 이뤄진다. 역량강화대학 66개교를 상대로 대학 12개교, 전문대학 10개교를 선정하며 선정은 권역별로 신청한 대학들을 경쟁 평가해서 발표된다. 지원 대학의 적정규모화와 특성화 발전을 위해 선정된 대학은 3년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2019년에는 12개 대학에 총 276억원(학교당 23억), 10개 전문대학에 총 130억원(학교당 13억)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의 전환은 아니므로 사업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역량강화대학으로 남아있다.

정원감축계획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 특성화와 발전계획을 토대로 선정되는데, 지방대학이나 국립대일수록 여기서 또 떨어지면 정부지원에서 더 멀어지기에 경쟁이 치열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총 30개교의 대상 대학을 토대로 수도권(2), 충청권(3), 대구·경북·강원권(3), 부산·울산·경남권(2), 호남·제주권(3)으로 나뉘어져 경쟁하며 실제로는 수도권의 3개교를 빼놓고 이 사업에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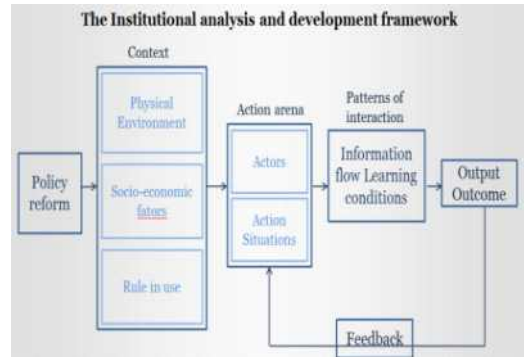
전문대학의 경우 총 36개교 대상 대학을 상대로 수도권(3), 강원·충청권(2), 대구·경북권(1), 부산·울산·경남권(2), 호남·제주권(2)이 선정되며 총 29개 대학이 지원했다.

3. 연구방법

3.1 IAD 모형을 활용한 대학구조조정정책 분석

IAD모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정책 분석에 중요한 요소 3가지(제도, 사회 경제적 요소, 물리적

환경)요소와 행동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결과물을 얻으며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림 3〉 IAD모형의 기본틀

3.2 3가지 요소

3.2.1 제도

개제도는 크게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공식적 제도는 공식적으로 형성이 되어있는 법규나 정치구조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운데 대표적으로 선거제도를 들 수 있다. 비공식적 제도는 사람들 사이에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관념이나 믿음을 말한다. 그 예로 정치이념을 들 수 있다. 즉 보수는 혁신 및 개발을 추구하고 진보는 재분배 및 복지를 추구하는 성향을 지녔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자면 공식적 제도는 시험이라는 제도를 지칭하고 비공식적 제도는 시험을 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관념을 지칭한다.

3.2.2 사회 경제적 요소

사회 경제적 요소는 정책수요자의 특징을 잘 표현해주는 요소로써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한다. 그 예로 지역의 학력수준, 취업률, 소득수준, 인종, 주택보급률을 들 수 있는데 어떠한 정책이 형성이 되었을 시 그 대상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그 예로 환경규제정책을 만들 때 어떤 공동체가 더 선호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그 지역의 소득수준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울산은 지역GNP수준이 1위이고 경산은 울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울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지역은 경산보다 충분히 개발이

많이 되었고 부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환경에 더 관심을 지닌다. 반면에 경산은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니기 때문에 환경규제 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3.2.3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은 그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로써 지역 인구규모, 인구밀집도, 대지규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어떠한 정책을 실시 할 때 대상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그 예로 바다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구사항과 고산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구사항은 다른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3 행동의 장

행동의 장 내부에서는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있어서의 변수들을 살펴보자면 (i)행위자들, (ii)참여자들이 놓여있는 지위, (iii)허용된 행위 및 행위와 결과간의 상관관계, (iv)개개인의 일련의 행위와 연관된 잠재적 결과 (v) 각각의 참여자들이 행하는 선택에 대한 여러 단계의 통제 (vi) 행위와 연관된 상황에 대한 각각의 참여자들이 가지는 정보 (vii) 행동과 결과물에 대한 비용과 편익 이 있다.

행동의 장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에 대한 예측은 주어진 상황과 정보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를 완벽히 예측하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예를 들어, IAD모델에서는 행위자들이 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자신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행위자로 가정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각각의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불확실성,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한계성에 부딪혀 합리성이 제약된다. 그리고 행위자들의 행동유인이 경제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외에 공동체의 규칙, 신념 등의 요소 또한 행위자의 행동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IAD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4 결과 및 피드백

행동의 장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의 실행을 통해서 정책이 어떻게 실제로 기능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책에 관한 장단점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정책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피드백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경제학적인 관념이 아닌 사회학적인 관념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문제점을 파악한 뒤 보완을 하고자 하는 내면의 동기로 인해 행동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4. 연구결과

4.1 IAD 모델을 이용한 대학구조조정 정책 평가

IAD 모델을 이용하여 대학구조조정 정책평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먼저 요인 3가지 중 물리적 요인에는 대학입학자원 감소를 넣었으며,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취업률, 출산률, 실업률 등의 요인들을 집어넣었고, 마지막 Rule in use에는 대학구조조정 정책 자체가 제도 또는 규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대학구조조정 정책평가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Action arena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현재 대학구조조정 정책평가가 변화해오는 과정을 좀더 논리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었다.

여전한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비판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면이 유리한 수도권 대학의 자율개선 대학 비율이 높은 반면 지방 대학의 비율은 상당히 낮으며 수도권 집중 때문에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그 점을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오히려 여태까지의 대학 평가도 수도권과 지방을 쿼터로 나눴고 이번 평가도 그렇기에 수도권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지방의 중위권 대학에게 유리했다는 평이다. 상술했듯이 대학구조조정 정책평가가 B등급부터 E등급 대학까지 해서 총 2만4000명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평가는 지역 별로 쿼터를 나눠서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21년까지 1만 명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다. 절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대학에겐 크게 불리하지만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 지방대에겐 크게 유리한 방식이다. 수도권 대학도 비서울권 대학이 서울권 대학에게 밀려 희생당하기 쉬운 구조이기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걸 간파해선 안 된다. 그래서인지 2019년 평가는 수도권 역량강화대학 쿼터 절반(3개교)을 서울권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전문대는 수도권 16개교 중에서 14개교가 비서울권이다.

다음 평가는 2020년 이뤄질 예정인데, 현재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 평가에서는 정원 감축 권고를 없앨 계획이라고 한다. 당장 2020학년도부터 전체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어지게 되는 시점에서 강제 감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4] 대신, 학생 충원률의 평가 비중을 높여 학생 충원률이 미달하는 대학교들의 인원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구조개혁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지적되어온 수도권-지방대학 간의 서열구조와 비인기학과 통폐합이 심화될 수 있다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시행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지방대학 간 서열구조가 이미 고착화 되었기 때문에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위주의 대학평가에서 불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취업시장에서는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대학서열을 중시하게 되며 이로 인해 수도권 대학에 학생이 몰려 대학서열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특성화 사업을 정원감축과 연계해 추진하게 되면서 비인기학과와 통폐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즉, 취업률이 떨어지는 비인기학과의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취업률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어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며 부실대학의 퇴출 유도 보다는 퇴출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문제점이 나타나

게 되는데, 이는 부실대학의 족벌체제에 대한 문제와 비리혐의를 줄이기 위해 퇴출 이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체제로 변화시키는 방안과 인근 공공립 대학에 대학 구성원을 편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 부실대학 퇴출 문제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대학’ 해소 방안은 대학개혁 차원에서 국립대학 확대 방안과 맞물려 별도로 수립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규모 감축은 적자생존의 비교육적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대학이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재정지원과 연계한 별도의 평가 방식이 아닌, 법정기준에 따라 기형적으로 팽창된 전체 사립대학 정원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구조조정 정책에서 지방대를 위크아웃의 대상으로 삼아 고사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대를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정책입안이 절실하고, 지방대 또한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종성(2018),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29(2), 227-248.
- 반상진(2013), 「교육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분석: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0(4), 263-287.
- 변기용(2018), 「문제인 정부 고등교육 개혁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2), 51-79.
- 이석열(2013),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0(4), 213-239.
- 사교육걱정(2016),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현황과 개선 대책 5회 연속토론회:1차 토론회 결

- 과보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사교육걱정(2017),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교육걱정없는세상, 2017.12.04
- 성경룡(2008),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8), 285-311.
- 송경오(2015), 「한국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정치학에 관한 토론」, 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춘계학술대회, 174-179.
- 장현주(2017),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논문들에 대한 분석: 중앙과 지방의 정책변동에서 정책선도가는 누구이며 정책의 창은 어떻게 열리는가?」, 한국지방정부학회, 21(2), 379-403.
- 정용남(2013), 「정부변동과 정책변동 관계이해 연구: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4), 103-141.
- 정일환, 주철안, 김재웅(2016), 「교육정책학 이론과 사례」, 서울:동문사
- 조홍순(2011), 「사립고자율화 정책 변동의 특성과 정치적 요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3), 145-170.

유 근 환(Yoo, Keun Hwan)



- 상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2002), 현재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일반행

정, 정책학, 조직관리, 정책분석, 정보체계론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에 관한연구”(2020), 초기청소년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로짓분석의 활용”(2019), “대구지역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사고특성(2000년대)을 중심으로”(2019), “성범죄예방정책에 대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2019),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운전자신감의 조절효과”(2019), “제대군인의 취업실태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 외국사례 비교를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

(khyoo@tsu.ac.kr)

투고일 : 2020년 04월 09일
심사일 : 2020년 04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4월 27일